한국사회에 사부대중이 고한다

1.21 전국승려대회

“종교편향 근절 불국정토 가는 길”

종교편향 · 불교왜곡 대응 종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1.21 승려대회, 숲스님 의지
종교편향에 희생 감내했지만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져
“불자들, 이차돈 성사 돼야”

“1월 21일 열리는 전국승려대회는 한국불교 모든 스님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편향을 일삼고 불교를 왜곡하는 이들에게 한국불교의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장이자 범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선광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는 종교편향에 대해 자비와 인내 그리고 희생으로 감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일부 단체들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막말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광 스님은 “정 의원의 발언이 시발점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 정부의 친가톨릭 행보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빈 초청을 받아 교황과 미국 가톨릭 주교를 만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활성화 캠페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종교의 선교 음악을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현 정부는 아주 지능적으로 가톨릭 선교와 홍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선광 스님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종교편향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길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다 이차돈 성사가 돼야한다”고 누차 당부했다.

“우리 모두는 ‘이차돈 성사가 되겠다’ 는 각오로 이번 전국승려대회에 임해야 합니다. 스님 5000명이 조계사에 모이지만 이는 한국 불교도의 전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의 경책에 정부와 여당은 귀기울여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규제가 적폐, 文정부 해결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정청래 망언, 다분히 의도적
“SNS 사과가 진정성 있는가”
잘못됨을 지적하는 승려대회
엄중히 위의 갖춰 치러낼 것

“종교편향 역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욱 지능적으로 특정종교의 선교가 이뤄졌죠. 정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에게 이념과 시기를 떠나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이자 봉행위원인 덕문 스님은 현재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태의 전말과 문제점에 대해 일갈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덕문 스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라고 봤다. 실제 정 의원은 나사렛성결회를 믿는 개신교 신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고 다선 의원임에도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에 대해 불교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당내 여론에 떠밀려 SNS를 통해 사과문 몇 글자 올린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그러면서 덕문 스님은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종교편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 내각의 가톨릭 편중 인사부터 ‘민족 전통 종교 역사 지우기’ 로 비판받는 가톨릭의 성지화 사업, 해외순방서 성당 방문 등 유례없는 가톨릭 편향 정책과 행보들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덕문 스님은 각종 불교 규제들이 ‘적폐’ 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불교를 둘러쌓고 있던 규제 해소에 대해 요청했지만 해결된 것은 없었다.

“문화재구역관람료 문제는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군사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만든 겁니다. 국립공원으로 인한 불교 규제는 적폐입니다.”

덕문 스님은 결연했다. 부처님 제자답게 위의를 갖춰 대회를 치르겠다고도 했다. “부득이하게 목소리를 내게 됐지만, 정중하고 엄중하게 위의를 갖춰 승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불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기자

왜곡과 폄훼로부터 한국불교 지키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지난 해 부터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의 불교왜곡과 종교편향 행위들로 인해 우리 불자들은 새해, 새 희망 대신 고통과 상처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탈종교화 현상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현재의 위기 속에서 한국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부대중이 중심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승려대회를 시작으로 범불교도대회까지 스님들을 외호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각오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를 향한 끊임없는 왜곡과 편향적 행위를 근절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며 종도로서의 역할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갈등 조장하는 정부는 사과하라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한국불교는 사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임진왜란 때 승병,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다수 등재되는 등 한국 역사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전통을 갖고 있으나 정작 보존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재구역입장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문화유산은 문화재 뿐만 아니라 수행과 종교행위가 일어나는 종교유산이라는 인식 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가 문제라면 이를 대체하는 제도나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선결되기 전까지 포교사단은 끊임없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문제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편향 방지 제도 개선 시급하다

송일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화난 불심에 정청래 의원이 신중하지 못한 언사로 불을 질렀을 뿐입니다. 대선을 두 달 남짓 남아있는 시기에, 종단의 승려대회가 정치적 이해타산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종교편향에 대해 침묵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종교평화위원회에서는 종교간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주어사 · 천진암 사건에서 보듯 종교 간에 평화를 원하는 불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의 무례함은 도를 넘어 왔습니다.

정부의 종교편향에 입 다물고 있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불교계는 정책적으로 소외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대부중은 불자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승려대회 개최를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갈등 해소를 위한 자세 필요해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종교편향 · 종교차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압력을 넣어 불편한 정서를 표출하기 이전에 이웃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불교계가 종교 편향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관심이나 방관일수도 있습니다.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불교계의 경우 이 같은 게 전무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종교화합도 서로 알고 이해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 · 종교차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종교갈등 역시 그 종교의 특징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종교편향 · 차별행위들에 대해 우리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불교 문화보존 의식 높여야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우리 청년대학생불자들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한국불교를 폄훼하여 많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요구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불교계의 입장과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불청 · 대불련 청년대학생불자들은 정부의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 무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불청 · 대불련 청년대학생불자들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담겨있는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문화재 보존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길 요구합니다.

불교 외호에 청년불자 적극 동참을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최근 천진암 및 주어사를 포함한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 비하 동영상 제작, 문체부의 크리스마스 캐롤 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의 거짓 선동과 불교 왜곡에 더해서 사찰비하 발언 등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종교 편향과 불교 차별 행위들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및 관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종교편향적이며 불교왜곡 사건들로 인해 우리 대학생 불자들을 비롯한 불교계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정부기관은 올바른 정책과 방향으로 종교편향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며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불교계에 사과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개인 신앙으로 시종일관 종교편향

문재인 정부(2017~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개인 신앙인 가톨릭만 받드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5월 취임 후 내각 구성도 안 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는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정권 초기 미국 · 중국 · 러시아 · 유럽연합 및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때에 가톨릭 주교를 로마교왕청에 특사로 보내는 유례없는 일까지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미사 참석 장면을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황과의 만남을 ‘알현(謁見)’ 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외순방 때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성당을 방문하고 고위 성직자를 만나 기본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2020년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을 펼쳐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인 ‘봉이 김선달’ 에 이은 것이라 불교계의 불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13일 청와대서 열린 축성식.